

보도	2024.6.12.(수) 조건	배포	2024.6.11.(화)		
담당부서	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책임자	국 장	홍석린	(02-3145-8270)
		담당자	팀 장	박재민	(02-3145-8129)
	대검찰청 형사3과	책임자	과 장	윤원일	(02-3480-2853)
		담당자	검 사	오승환	(02-3480-2906)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책임자	총 경	강태영	(02-3150-2037)
		담당자	경 정	유지훈	(02-3150-2763)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단	책임자	단 장	박진무	(054-810-1090)
		담당자	팀 장	윤성묵	(02-6923-9131)

부처간 칸막이를 없앤 적극적인 공조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2차 지원 착수

- 적극적인 피해사례 발굴, 신속한 소송지원을 위해 금감원, 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간 협조체계 구축
- 반사회적 대부계약 피해자 8명에 대해 소송 무료지원(3명 소 제기 완료)

주요 내용

-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무료 지원함으로써 반사회적 대부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24.2월 첫 소송지원에 이어 무효 가능성이 높은 피해사례 발굴 및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금감원, 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8명에 대해 2차 소송지원*에 착수하였습니다.
- ※ 8명중 3명에 대해 소송 제기(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소송제기 예정), '24.2월 소송을 기제기한 1명을 포함하여 현재 4명에 대한 무효소송이 진행중
- 금번 소송 지원사례는 검찰, 경찰의 협조를 바탕으로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 연 수천%의 초고액 이자 요구 및 성착취 추심 등의 불법추심뿐만 아니라 피해자 협박을 통한 차명계좌 제공 요구 및 범죄 활용, 피해자 가족 사진의 성매매전단지 합성 및 배포 협박 등 1차 소송지원시 다뤄지지 않았던 악질적인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구제와 판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금감원, 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은 실효성 있는 무효소송 지원을 위해서는 소송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의 신속한 확보, 시의성 있는 사례 및 지원대상 선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업무협업 체계를 구축하였는 바,
- ※ ①기소·수사 완료 건 중심의 피해사례 발굴(검·경), ②피해자 면담 및 소송희망자 파악(금감원), ③소송절차 진행(법률구조공단)
- 향후에도 다양한 피해유형에 대한 판례 축적 및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I. 개 요

-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23.11.9.)」에서의 대통령 지시사항*의 후속조치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무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3.12.7./‘24.2.7. 금감원·공단 보도자료)
 - * 민생을 약탈하는 불법사금융 차단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을 지시
- 반사회적 행위를 수반한 대부계약의 무효를 통해 피해자의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 지속적인 소송지원과 판례 축적 등을 통해 반사회적 행위는 용납되기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 ‘24.2월 첫 소송 지원에 이어 무효 가능성이 높은 유의미한 피해사례 발굴 및 신속한 피해지원을 통한 무효화 소송을 지속 확대하기 위해
 - 금감원, 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8명의 피해자에 대한 추가 소송지원에 착수하였습니다.

II. 소송지원 주요 내용

가 | 소송지원 사례

- 금번 소송지원은 검찰, 경찰의 수사를 통해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 8명과 관련된 것으로,
 - 검찰, 경찰로부터 협조받아 소송 참여의사를 밝힌 범죄 피해자 중 소송 준비가 완료된 3명에 대해 즉시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법률구조공단의 공익소송 절차에 따라 신속히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 ‘24.2월 소송을 기제기한 1명(지원사례 2명 중 1명 중도포기)을 포함하여 현재 4명에 대한 무효소송이 진행중

< 2차 소송지원 사례 주요내용 >

협조 기관	수사결과	형사재판 진행사항	무효소송 지원 진행사항
서울경찰청	10명(구속 4) 기소	(1심) 징역 9년 실형 등 선고 → 검찰 항소	피해자 3명, 계약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소송 접수(5.29.)
대전지검	3명(구속 3) 기소	1심 재판 진행중	피해자 3명 소송 제기 예정
경기남부경찰청	6명(구속 5) 기소	(1심) 징역 8년 실형 등 선고 → 검찰 항소	피해자 2명 소송 제기 예정

- 특히, 이번 소송지원 사례 중에는 연 수천%의 초고액 이자 요구 및 성착취 추심 등의 불법추심뿐만 아니라 추심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계좌를 범죄수익 은닉 목적의 차명계좌로 활용하거나,
- 가족의 사진을 성매매 전단지와 합성하여 가족의 직장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1차 소송지원시 다뤄지지 않았던 악질적인 피해사례가 소송에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 세부 소송지원 피해사례는 <붙임1> 참고

나 부처간 협업체계 구축 및 공조

- 이러한 피해사례의 확보는 부처간 칸막이를 없앤 적극적인 협업의 결과로,
- 금감원, 검찰, 경찰, 공단은 실효성 있는 무효소송 지원을 위해서는 소송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의 신속한 확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시의성 있는 사례와 지원 대상 선정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 기소·수사 완료 건 중심의 피해사례 발굴*(검·경), 피해자 면담 및 소송희망자 파악(금감원), 소송절차의 신속한 진행(법률구조공단)의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금감원에 접수되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신고내용 및 증빙이 구체적이지 않아 소송을 위한 증빙 확보, 채권자 특정에 장시간 소요

- 이를 통해 향후에도 다양한 피해유형에 대한 판례 형성 및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III. 소비자 유의사항 및 향후 계획

가 소비자 유의사항

- 불법사금융은 초고금리 이자와 반사회적 추심행위 등으로 사금융 이용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한 번 빌리면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만큼,
 - 소비자분들께서는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요령을 항상 숙지하시어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붙임2 참고) >

- ☑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우선 확인(서민금융진흥원)해 보세요!
- ☑ 거래상대방이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 대출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세요!
- ☑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을 확인·보관하세요!
- ☑ 연 20% 초과 이자, 중개수수료 등 법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정확히 숙지하세요!
- ☑ 피해발생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사업을 통해 구제 받으세요!

- 만약 불법추심, 고금리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3번)를 통해 신고·상담이 가능하며, 피해 구제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활용도 가능합니다.

나 향후계획

-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의 첫 무효사례를 이끌어내기 위해 향후 소송 과정에 적극 지원·대응해 나갈 예정이며,
 - 다양한 피해사례에 대한 판례 축적을 위해 추가 피해사례를 파악하여 무효화 소송을 연중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검찰·경찰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피해구제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며,
 -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근절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① A씨 피해사례

- ◆ A씨는 인터넷 대부중개플랫폼(OOOO)을 통해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급전을 빌리게 되었다.

2022.11월부터 약 3개월간 7회에 걸쳐 30~70만원씩 총 290만원을 차용하였으며, 상환기간은 14~28일이었고 그 기간 총 584만원을 상환하여 이자율이 782%에서 4,461%에 달했다.

불법 사채업자는 A씨가 당초 200만원의 대출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능력이 충분한지 검증해야 한다며 30만원 대출, 7일 후 50만원 상환요구를 약 3~4차례 반복하였고, A씨는 동 과정에서 고리의 이자를 부담하며 자금부족 상태가 심화되었다.

- ◆ A씨가 대출기간 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자 사채업자들은 채권 추심에 활용할 목적으로 확보한 A씨의 상의 탈의 사진과 전신 나체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사채업자의 SNS 계정(인OOOO)에 A씨의 위 나체사진을 게시한 뒤 이를 캡처한 사진을 A씨 및 A씨의 친구, 가족, 지인 등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하는 등 불법촬영물을 유포하였다.

- ◆ 또한, A씨는 사채업자로부터 ‘통장을 넘겨주면 이자 감면과 상환기일을 연장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의 계좌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으며,

동 계좌는 사채업자의 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등을 가장하는데 사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A씨는 사채업자들로부터 대포통장 개설 등으로 신고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받기도 하였다.

⇒ 계약무효확인, 기지급한 원리금 584만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및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800만원 청구

② B씨 피해사례

- ◆ B씨는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여러 업체에 연락하였으며, 이를 전달받은 불법업자로부터 연락이 와 급전을 빌리게 되었다.

2022.11월부터 약 한달여간 5회에 걸쳐 30~80만원씩 총 230만원을 차용하였으며, 상환기간은 21~84일이었고 그 기간 총 476만원을 상환하여 이자율이 556%에서 1,796%에 달했다.

- ◆ 불법 사채업자들은 B씨가 제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자 대출 당시 제공한 지인 연락처를 통해 지인들에게 폭언, 협박 등을 하였고,

B씨는 불법 사채업자가 “나체사진을 보내면 상환 기한을 연장해 주고, 나체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지인 등에게 협박하겠다”고 하여 상체가 노출된 사진을 보내게 되었다.

사채업자는 B씨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전화하여 가족을 자칭하며 통화를 시도하기도 하고, 그 무렵 B씨에게 전화하여 ‘돈을 갚지 않으면 자녀 학교에 나체 사진을 뿌리겠다’라고 협박하기도 하였다.

- ◆ B씨는 업자들이 나체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았지만, 지인·가족의 연락처 및 나체사진을 활용하여 폭언, 협박 등 추심으로 일상생활이 파괴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 계약무효확인, 기지급한 원리금 476만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및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50만원 청구

③ C씨 피해사례

- ◆ C씨는 인터넷 대출광고를 통해 알게 된 대부업자에게 급전을 빌리고자 대출을 신청하였다.

2022.11월부터 약 6개월간 14회에 걸쳐 30~60만원씩 총 450만원을 차용하였으며, 상환기간은 6~21일이었고 그 기간 총 890만원을 상환하여 이자율이 1,738%에서 4,171%에 달했다.

- ◆ 불법 사채업자들은 C씨가 대출기간인 7일 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자 대출 당시 제공받은 가족, 친구 등 연락처를 활용하여 지인 등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였고,

채무 담보용으로 확보한 나체 사진(얼굴과 하체 노출)을 친구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고, 다시 제때 입금하지 않으면 대출 당시 제공한 연락처를 활용하여 지인 전체에게 나체사진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였으며,

미리 받아 놓은 C씨의 가족 연락처를 이용하여 가족의 SNS(카OOO) 프로필 사진을 확보한 후 이를 다른 나체사진과 합성하여 성매매 전단지 사진을 만들고 가족의 직장에 팩스로 전송하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하였다.

⇒ 계약무효확인, 기지급한 원리금 890만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및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50만원 청구

☑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우선 확인해보세요!

- 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확인
<서민금융진흥원(☎1397, www.kinfa.or.kr) 참고>

☑ 거래상대방이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②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증번호·광고용 전화번호 등을 조회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 금융회사 → 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
③ 조회되지 않는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즉시 전화·상담 중지

☑ 대출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세요!

- ④ 신체사진, 지인 연락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설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 성착취추심 등 악질적인 불법추심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 주의
⑤ 통장 또는 휴대폰을 개통하여 넘기거나 신분증을 업체에게 맡기는 경우, 범죄피해를 입을 뿐 아니라, 의도치 않게 범죄 가담자가 되는 사례 존재
⑥ 게시자가 불분명한 홈페이지, SNS에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남기는 경우, 불특정 다수의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연락을 받게 될 우려

☑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확인·보관하세요!

- ⑦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체결시 소비자에게 대출조건을 설명하고, 대출조건이 명시된 대부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할 의무

☑ 법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정확히 숙지하세요!

- ⑧ 「대부업법」에 따른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이며,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
⑨ 어떠한 명목(수수료·사례금·착수금·거마비 등)으로도, 대출·대부 알선에 대한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

☑ 피해발생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사업을 통해 구제받으세요!

- ⑩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사업을 통해 최고금리 위반,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우려)자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 중
*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법률구조공단(☎132)를 통해 신청
※ 또한, 지인추심·성착취추심 등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대부계약 피해자 구제를 위해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중('23.11월~)

√ (전화 신청)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온라인 신청)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로 접속 후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참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①불법추심 피해(우려)자의 **채무자대리인** 및 ②**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구제를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

다만, **소송대리인**의 경우는 수익자 부담원칙·재정여력 등을 감안하여 **기준중위 소득 125%(1인 가구 기준 月 278.6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